

미래 신산업 등 전북 강점 활용 위기극복에 힘 더 쓸 것

송하진 도지사에게서 들어보는 새해 전북도정 운영 방향

송하진 도지사가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송지사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홍수 등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민·관·정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 국가예산과 전북도 예산 8조원 동시 개막,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새만금 대기업 유치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올해에도 이 여세를 몰아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고 청정 자연,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 생태여행체형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도정운영 방향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새해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전북형뉴딜, 생태문명에 방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개인·사회·국가가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원대한 꿈(목표)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의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올해의 사자어로 선정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감염 차단과 피해를 최소화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튼튼한 안전망을 세우는 것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2021년은 민선 7기 4년차가 되는 해로서 그간 진행해오던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등 5대 도정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들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 본격 추진하면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을 준비해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2019년 10월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이 진행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과제는?

지난해 12월 21일 산업부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기업인 명신과 위탁계약했던 중국 바이톤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신청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최근 명신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과 위탁 생산계약 체결해 재추진됐다. 1월 말쯤이면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서 명신, 에디스모터스 등 5개 전기차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1,704명의 일자리와 2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3일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발표한 이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형 뉴딜의 추진계획은?

전북형 뉴딜은 농생명·한스타일 문화,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도만의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수입 및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방향으로는 첫째, 주력산업과 D·N·A(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확충하고, 둘째,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사회를 선도하며, 셋째,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 기술이 융화되는 공생사회 실현 등 3가지를 정책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최근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탄소 등 신산업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새해 전망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 추진 등으로 주력산업의 대도약 기반을 마련했고, 미래차로 전환, 수소생태계 조성, 홀로그램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산업 스펙트럼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신산업 육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 추진중으로 새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주민 합의를 도출한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400MW)를 추진하는 등 그린 성장을 주도할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으로 친환경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일부 완료했으며,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완공, 튜닝카 테마파크 조성 및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등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추진에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3월에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지난해 공모 선정된 탄소융합제품R&D추진 및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실증 차수소 탄소융복합품 신시장 창출을 적극 추진해 탄소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ICT산업육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전북형 D.N.A 생태계 기반 마련과 ICT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꾸준히 얘기해오셨습니.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성공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에도 성공했다.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 산업기지는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거점기관으로 참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 등 6개의 연구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단 일부를 배후공간으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를 조성해 군산 주력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농생명 중심의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특구가 풍부하게 갖춰지게 됐다.

이들 특구를 중심으로 전북의 먹거리가 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 전북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형 뉴딜, 궁극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등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표”

“동서내륙벨트 조성 추진되면 수도권 집중 정책 등이 동서간 발전축으로 전환 계기”

다양한 기술과 응용제품,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

지난해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농업분야의 성과가 큼. 삼락농정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호우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에게 힘든 한해였다.

다행히 농민분야는 총 6,834억원이 재난지원금과 농업보험금, 직불금이나 농민 공익수당과 같은 현금성으로 소득이 보전돼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특히, 작년에 농민 공익수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에는 양평농가와 어가까지 포

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을 농생명산업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푸드랜드 건립', '간척지농업 연구동 건립'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도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해는 전라감영 복원 등 전북의 자존의식이 고양된 한 해였는데? 역사문화 분야와 관련, 향후 계획은?

지난 9월, 남원 유곡·두리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돼 2021년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해에도 전북자존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을 가속화하고,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기반 조성 및 백제·후백제 역사 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힐링여행 및 생태관광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올해부터는 전북의 아름다운 산과 들, 물(강·바다 등), 숲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생태

관광 통합브랜드와 캐리커를 개발해 (가칭) '초록원정대'와 함께하는 전북 여행' 등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생태관광 관련 국가 및 국제 브랜드 획득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전북의 산하가 국내 최고의 치유·힐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생태체험 공간의 조성과 생태관광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시·도 간 통합논의가 이슈인데? 전북은 독자 권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초광역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이 균형역 공도 선정됐습니다. 전북의 초광역 협력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에서 전국을 3+2+3의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독자권역으로서 발전전략과 새만금~전주~대구~포항에 이르는 동서내륙벨트 조성 등 초광역 발전전략을 구상해왔다.

그 결과 균형발전위원회의 '동서 내륙벨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경북과 산업·문화관광·생태·힐링 분야에서 연계·협력이 가능 공도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하고 더 나아가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간 철도 등 광역 SOC 구축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그동안 수도권 집중 정책과 남북축 위주의 국도발전 정책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간 발전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전북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과 전주·군산·익산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갖추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동부권을 포함하는 도내 전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전·충청권의 외연 확대에 대비하고 새만금과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산업 및 SOC 분야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해 도민들에게 전할 말씀은?

신축년 새해는 소의 해다. 소는 '여유와 풍요, 힘'을 상징한다.

2021년 한 해 모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예전과 같이 가족, 지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가 어려웠지만, 새해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모두가 여유와 풍요를 되찾았으면 한다.

우리 도정은 전북형 뉴딜 등 신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힘을 더하고, 재난예방대책·보건 의료정책·생활복지정책으로 도민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 동참이 필수적이다.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우기일 때 더욱 어렵고 힘든 이웃과는 온정을 나누고 추위,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응원과 보내주셨으면 한다.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함께라면 2021년이 희망의 해가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유호성 기자

부안 진서 종오리농장서 AI 의사환축 확인

전북도는 5일 부안군 진서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환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종오리 약 6천여 마리를 사육중이며, 농장 관리자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에 따른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AI 환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이며, 판정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환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

밀검사 중이다.

한편, 이번 오리농장은 지난 1월 1일 부안군 출포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와 13km 거리에 있으며, 사육하고 있는 오리는 모두 살처분 할 예정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할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갑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유호성 기자

'차보다 사람이 우선'

민주 한병도 의원 '보행자 우선도로 법안' 발의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의원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2개 법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차량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뤄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보

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해 걸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집, 상가 주변 같은 우리 동네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